

# 일본문제와 한일관계의 미래

2020.08.18(화)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yulsohn@yonsei.ac.kr



# 목 차

- I. 일본문제와 한일관계, 현상
- II. 무엇이 문제인가?: 갈등의 구조
- III. 역사적 견지에서의 한일관계
- IV. 아베 정권의 이해
- V. 민족주의 vs. 민족주의
- VI. 미래의 한일관계
- VII. 미래의 준비

# 수교이래 최악의 한일관계

## 신뢰의 위기

- 이익 충돌 보다는 감정 대립
- 지도자간 소통 부재: 9년간 정식 양자 정상회담 없었음.
- 감정싸움: 상대방 비난 → 여론 악화
- 악화된 여론 정치적 이용, 혹은 악화된 여론에 정치적으로 구속

## 정치 갈등의 확산

- 불신은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 갈등에서, 안보, 경제 분야로 전방위 확산
-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위상 하향 조정
- 서로 거리 두기, 경원시(敬遠視), 적대시(?)

# 2012년 이래 구조적 현상

- 2012 위안부 문제 처리 공방, 독도 방문, 천황사죄발언, 한일 통화 스와프 갱신 거부
- 2013 아베 총리 전쟁 침략 발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 2014 고노 담화 재검토, 정상회담 거부
- 2015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논란, 위안부 합의
- 2016 위안부 합의 거부 논란, 부산 소녀상 건립 시도.
- 2017 대선후보 5인 합의 파기/재협상 주장, 신정부 위안부 합의 재검토
- 2018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동해상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진실 공방, 제주 관함식 욱일기 논란
- 2019 무역보복 공방,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보류
- 2020 출입국 조치 공방, 유네스코 등재 논란 재연, WTO 사무총장 선거, G7 확대 공방

# 역사 속의 한일관계 (1) - 식민지 청산

한일 갈등의 원점(原點)은 1965 한일협정, 원죄는 박정희에 있는가?

경제 재건, 반공 연대, 역사 봉합

- 식민지 지배 불법론 vs. 정당론
- 식민지 착취론 vs. 시혜론
- 배상금 vs.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
- “단순한 영토 분리시 국가의 재산 및 채무의 계승 관계”



\*오늘의 문제, Global process로 볼 수는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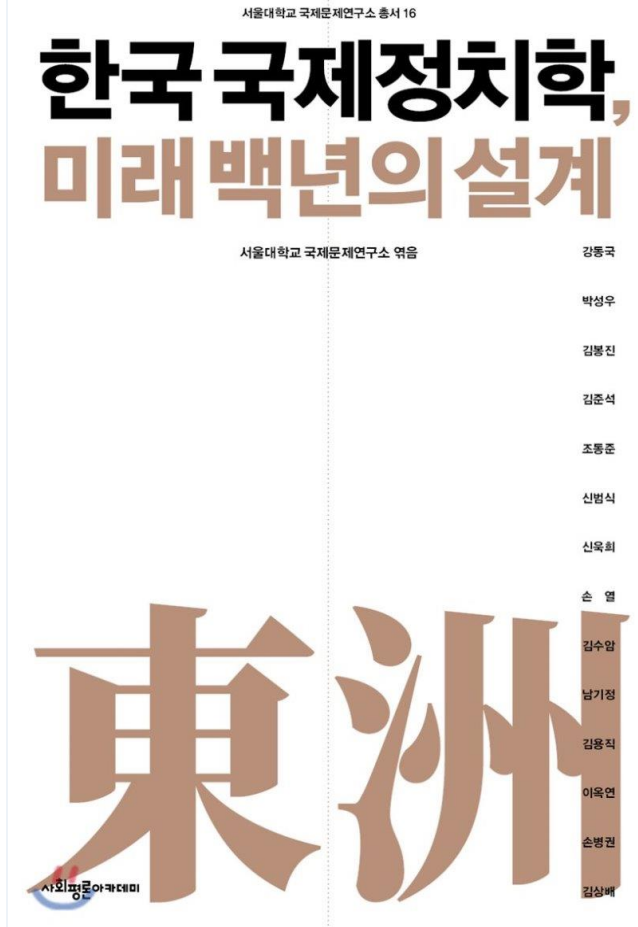
\*식민지 36년 이전의 한일관계는 정상적이었나?

- 김대중: “50년도 안되는 불행한 역사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1998.10.8. 일본국회 연설)”

# 역사 속의 한일관계 (2)

## 동주 이용희,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

- 감정의 국제정치학: 이미지, 心像
- 과잉 의식, 자기 분열적 심상
- 관심과 무관심의 이중주
- 관심도는 문명의 중심과의 거리와 관련됨
- 문명의 근접부와 주변부 사이 갈등



# 변경문화의식의 갈등

- 圈域이론: 국제정치권, 국제사회란 행위자간의 정당화·합리화된 개념체계, 가치, 규범이 공유되는 세계
- 중심부-주변부-반주변부, 3층의 위계구조로 구성
  - 1) 중심부는 문명가치의 기준을 제시, 전파가 시작되는 곳,
  - 2) 주변부는 전파를 수용하는 곳,
  - 3) 근접부는 “전파세력에 이미 충분히 순응하여 중심부의 견고한 외곽을 이룰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변부에 전파자의 구실을 하는 세력”
- 근접부와 주변부 사이의 관계는 ‘해바라기 현상’: 해바라기가 항상 태양을 향하듯이 근접부와 주변부는 문명의 중심에 관심을 집중하고 중심을 향해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표출함.
-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향해 문명적 관심을 표출하며 경쟁적으로 전파도(傳播度)의 우열을 가늠하고 정체성의 우열을 규정하는 경쟁을 벌여왔음.

# 자기 분열적 심상의 진화

## 한 국

### 전통 국제정치권(1-2-3기)

- 무관심
- 문화적 멸시감/우월감  
(고려 - 왜구, 조선 - 야만/絶域)

### 전통국제정치권(임란 이후)

- 군사적 굴욕감(야만의 침략); 원한
- 문화적 멸시감(무력으로 굴욕 당한 반작용)
- 우월감(外藩 취급)

### 근대 국제정치권(4-5기)

- 전통적(문화적) 멸시감
- 군사적 굴욕감 (운양호 사건, 갑신, 동학, 청일, 러일, 식민지화) + 악덕 일본, 강압 일본
- 근대 문화적 열등감: 일본을 통해 선진문명 흡수; 서양의 모방

### 역사문제

- 저항 민족주의 고착
- 도덕적 우월감

## 일 본

### 전통국제정치권(1-2-3기)

- 선진문화국에 대한 관심
- 문화적 열등감 (문명 수용)
- 멸시감 (神國/황국관에 기초하여 “삼한 정벌”; 무력 우위 의식; 악덕의 나라 (신라); 文弱, 중국의 속국; 중국문화 모방; 여몽 침입; 대마도 점령)

### 전통국제정치권(임란 이후)

- 군사적 멸시감(조선의 문약, 자존자대 비난); 열등감
- “조선은 길이 隣好 맺을 나라 아님“ (외번 취급에 분개)

### 근대 국제정치권(4-5기)

- 근대적(문화적) 우월감 (조선은 야만; 脫亞論)
- 전통적 멸시감 (문약, 중국의 속국)
- 무관심

### 역사문제

- 근대적 정체성 훼손
- 도덕적 책임론



#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

## 1. 복고 민족주의의 부흥

- 세계화 시대 일본의 상대적 쇠퇴 흐름을 돌리기 위해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고 재현
- 일본의 자신감 상실은 잘못된 역사교육(victor's justice), 이를 청산하고 전전 일본의 영광을 복원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정치'

## 2. 한국에 대한 심상

- 자국의 쇠퇴, 한국의 추격(경제성장, 한류)에 따른 심상의 변화
- 상대적 무관심에서 불안감으로
- 우월감: 메이지 영광의 재현; 한국은 일본 근대화의 희생양, 그러나 당시 국제질서(제국주의 질서) 하에서 정당한 행위 → 한국과 정체성 갈등
- 멸시감: 한국의 오만, 무례로 국가 체면을 손상할 수 없다.
- 감정적, 자기분열적 심상

## 3. 심상을 정책으로: Korea bashing

- 한국과 역사 갈등을 “사죄피로,” “골포스트론,” “고자질 외교”로 프레임.

# Empire Strikes Back?



“제국의 향수”:

“레트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민족주의 고양

# 일본의 對韓 여론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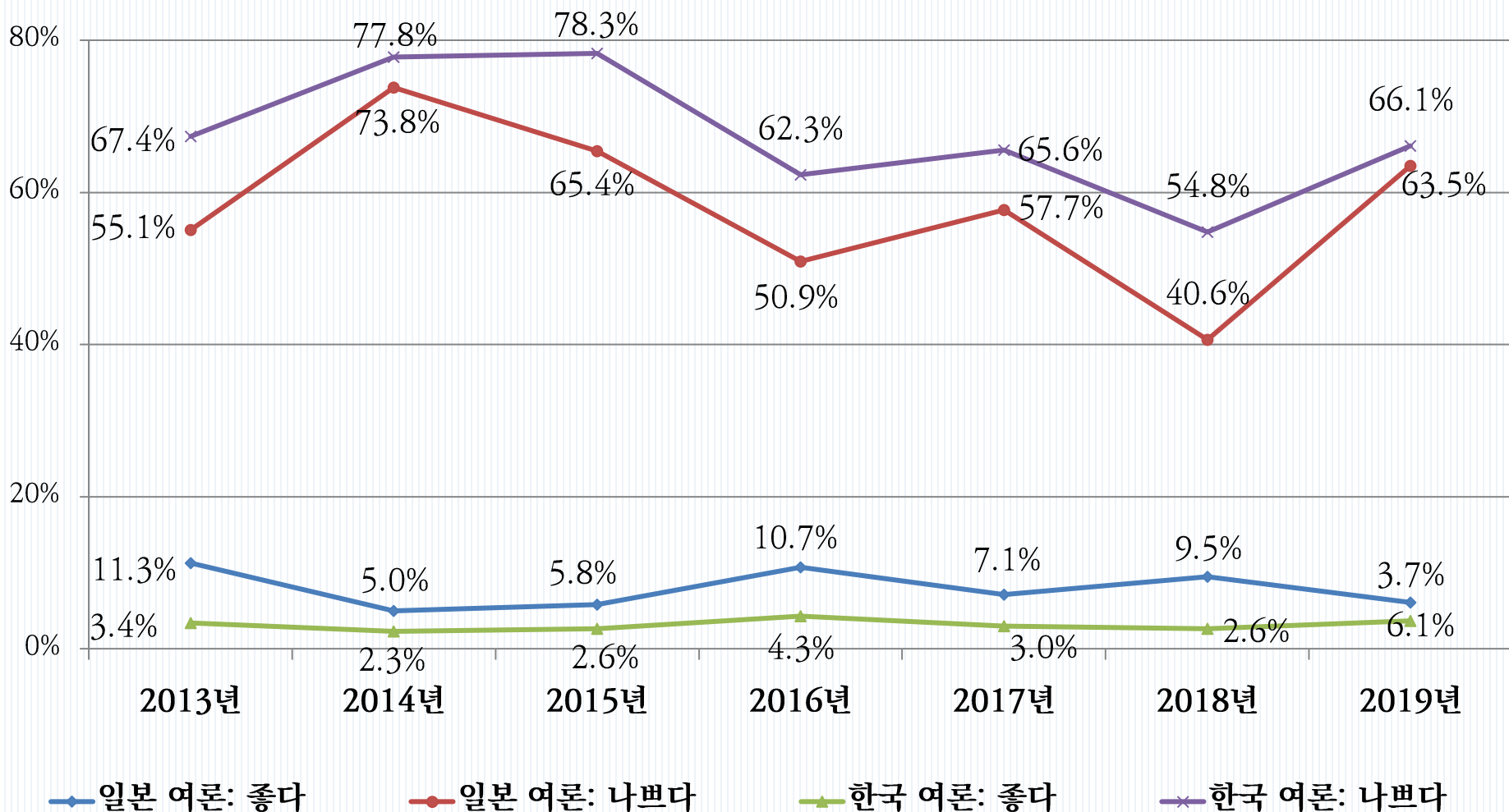
2015년 기점으로 역사문제, “수세”에서 “공세”로:  
“약속을 안 지키는 국가”, “신뢰할 수 없는 국가”

역사문제를 다루는 한국인의 태도와 행동에 위화감을 보임  
(질문: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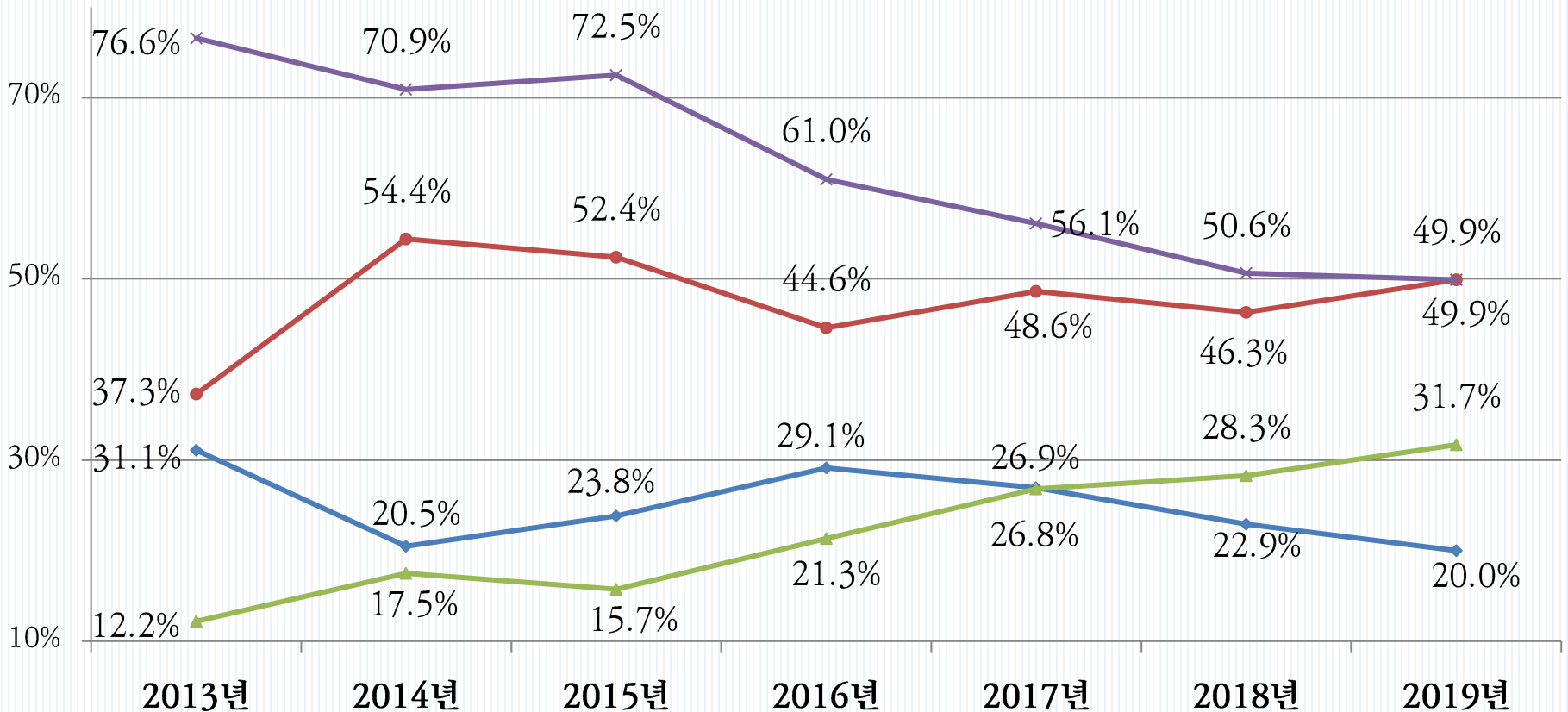
- ‘역사문제로 일본을 끊임없이 비판하기 때문’ (52.1%),
- ‘한국인의 감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24.8%),
- ‘한국인의 이해하기 힘든 애국적 행동 때문에’ (23.2%)



# 현재의 한일관계 평가 (EAI-Genron 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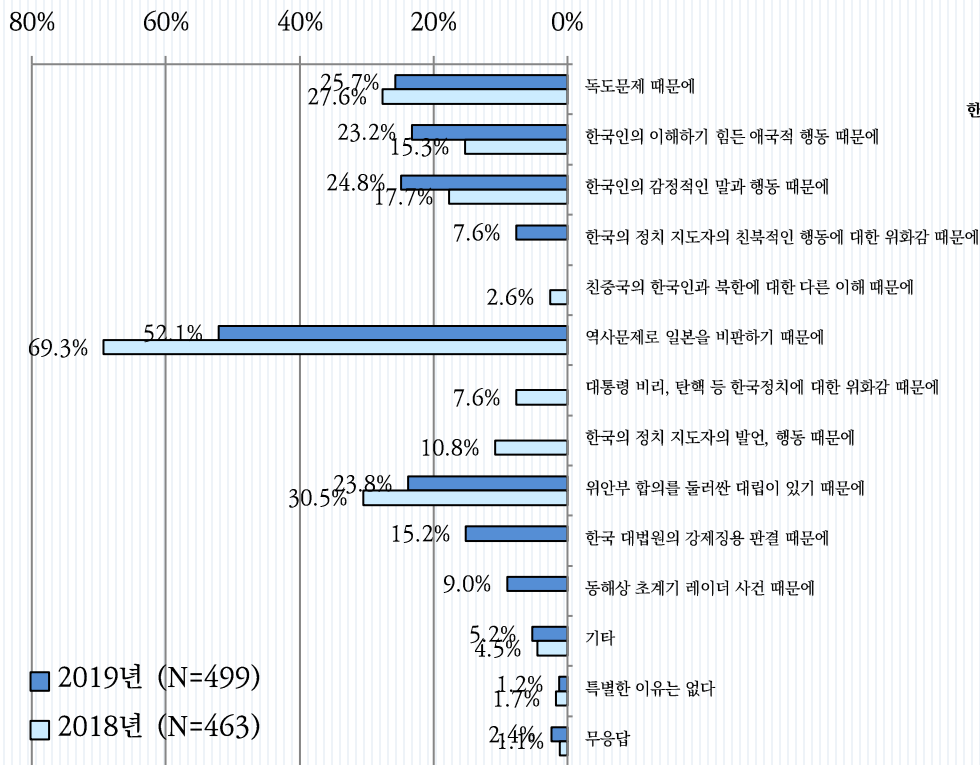
# 상대국에 대한 인상 (20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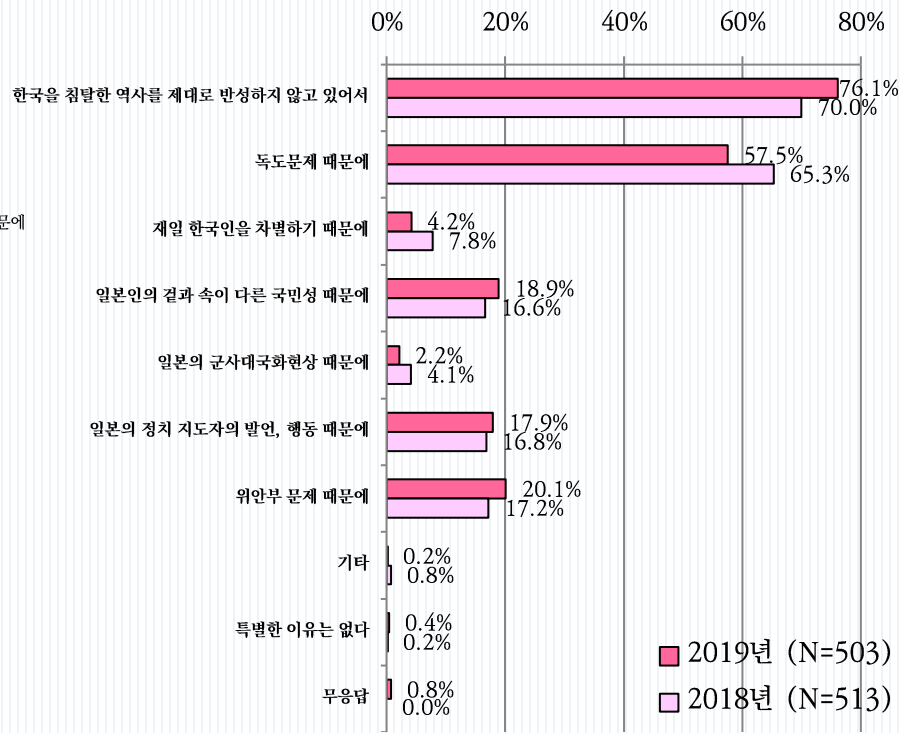
◆ 일본 여론: 좋은 인상   
 ● 일본 여론: 좋지 않은 인상   
 ▲ 한국 여론: 좋은 인상   
 × 한국 여론: 좋지 않은 인상

#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 일본국민 (N=1,000)



## 한국국민 (N=1,008)



	독도문제	한국인의 이해하기 힘든 애국적 행동	한국인의 감정적인 말과 행동	한국의 정치 지도자의 친북적인 행동에 대한 위화감	친중국의 한국인과 북한에 대한 이해	역사문제로 일본을 비판하기	대통령 비리, 탄핵 등 한국정치에 대한 위화감	한국의 정치 지도자의 발언, 행동	위안부 합의 둘러싼 대립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동해상 조계기 레이더 사건	기타	특별한 이유는 없다	무응답
19년	25.7%	23.2%	24.8%	7.6%	-	52.1%	-	-	23.8%	15.2%	9.0%	5.2%	1.2%	2.4%
18년	27.6%	15.3%	17.7%	-	2.6%	69.3%	7.6%	10.8%	30.5%	-	-	4.5%	1.7%	1.1%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독도문제	제일 한국인을 차별하기	일본인의 겉과 속이 다른 국민성	일본이 군사대국화현상을 지향하고 있기	일본의 정치 지도자의 발언, 행동	위안부 문제	기타	특별한 이유는 없다	무응답
19년	76.1%	57.5%	4.2%	18.9%	2.2%	17.9%	20.1%	0.2%	0.4%	0.8%
18년	70.0%	65.3%	7.8%	16.6%	4.1%	16.8%	17.2%	0.8%	0.2%	0.0%

# 한국의 저항민족주의

- 한국 민족주의는 구한말 저항운동, 3.1운동 등 외세에 의해 존립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자란 ‘저항 민족주의’적 속성을 띠고 있음. 외세의 핍박에 대해 거족적으로 대항하는, 피동적으로 저항하는 단계.
- 구미의 민족주의가 대내적으로 억압 지배층에 대한 시민권의 확립으로 시작했고 자유와 해방을 담고 있었다면, 저항 민족주의는 대내적 체제 정비보다는 단결된 대외 저항을 위하여 민족의 일체감을 복돋우고 단결을 강화.
- 민주화는 권위주의 정부 하 한일 유착 구조 와해시켰으나 저항민족주의는 온존
- 2010년대 저항 민족주의, 박근혜-문재인 정부 계승
- “두번 다시 지지 않겠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 일본의 복고 민족주의와 정면 충돌

# 아베 정부의 7.1 수출규제 조치와 상호 보복

## 1. 일본의 보복 조치

배경: 위안부 합의 형해화, 징용재판에 대한 한국정부 조치에 대한 분노

한국에 대한 불신 증폭, Korea passing (한국의 전략적 위상 하향조정)

- 2015년 ‘자유,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기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 삭제;
- 2018년 우호국 범주에서 제외, 안보협력 순위 강등 등 Korea passing and bashing.
- 군사력 강화(자강) + 미일동맹 + QUAD; CPTPP; 인도-태평양(FOIP).

## 2. 한국의 상호 보복 조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상호 제외

일본상품 보이콧

WTO 제소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보류)



# 강제동원 재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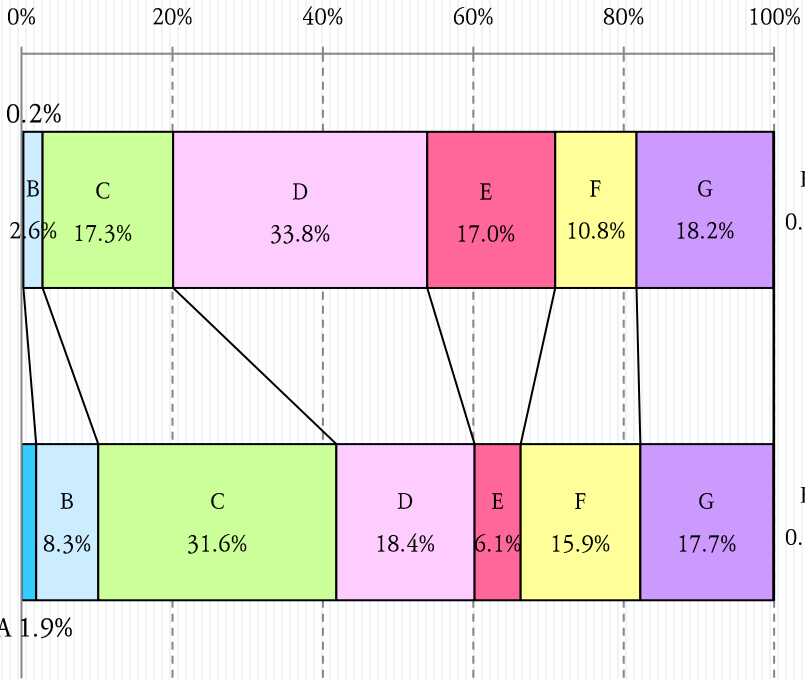
- 위안부 사례는 교섭 당시 47명, 강제징용은 현재 재판 계류 900여명 (징용·징병 피해자 21만여)
- 상황 방치하면 강제집행 → 일본 보복조치
  - 금융 및 관세보복, 일본내 한국자산 동결 등
- 아베 정부는 각부처에 100여개 보복 조치 제출, 준비
- 경제전쟁 2nd Round?

# 정부/정치지도층 vs.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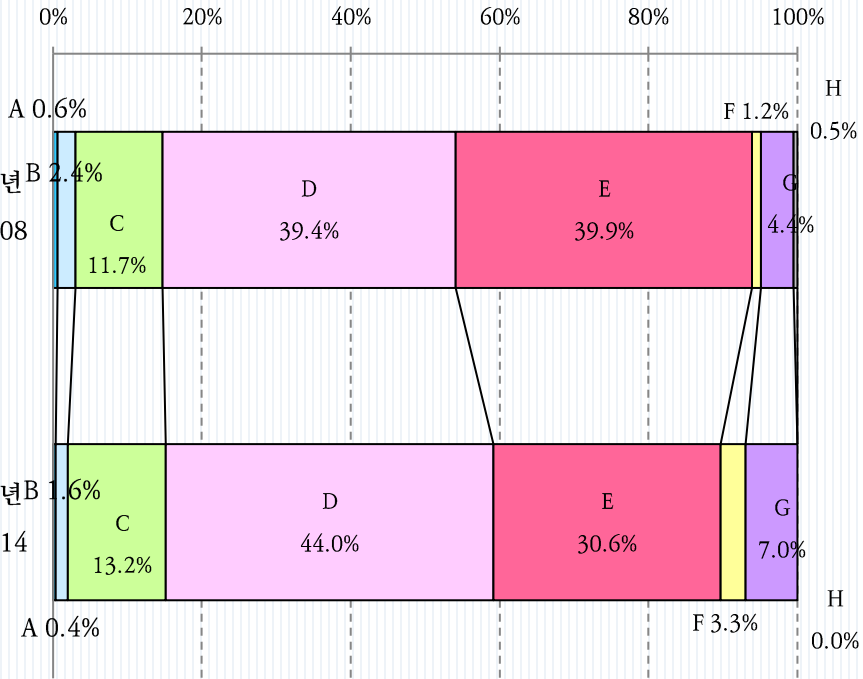
- 한국의 일반 국민, 저항 민족주의적인가?
- 일본의 일반 국민, 복고 민족주의적인가?
- 정부/정치지도층과 국민 사이의 디커플링?
- 정치가 문제다?

#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 일본국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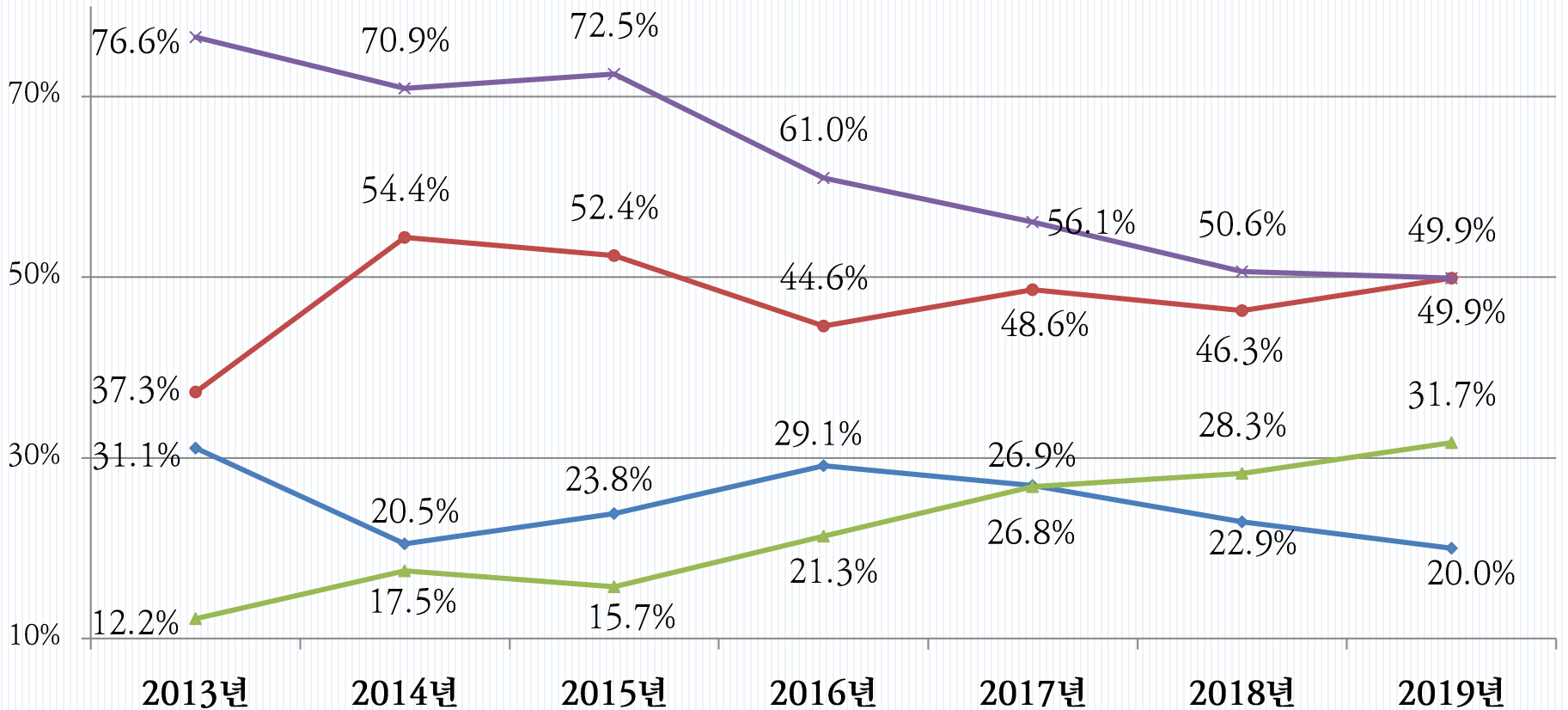
## 한국국민 (N=1,008)



	A	B	C	D	E	F	G	H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	매우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무응답
19년	0.2%	2.6%	17.3%	33.8%	17.0%	10.8%	18.2%	0.1%
18년	1.9%	8.3%	31.6%	18.4%	6.1%	15.9%	17.7%	0.1%

	A	B	C	D	E	F	G	H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대체로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	매우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무응답
19년	0.6%	2.4%	11.7%	39.4%	39.9%	1.2%	4.4%	0.5%
18년	0.4%	1.6%	13.2%	44.0%	30.6%	3.3%	7.0%	0.0%

# 상대국에 대한 인상 (20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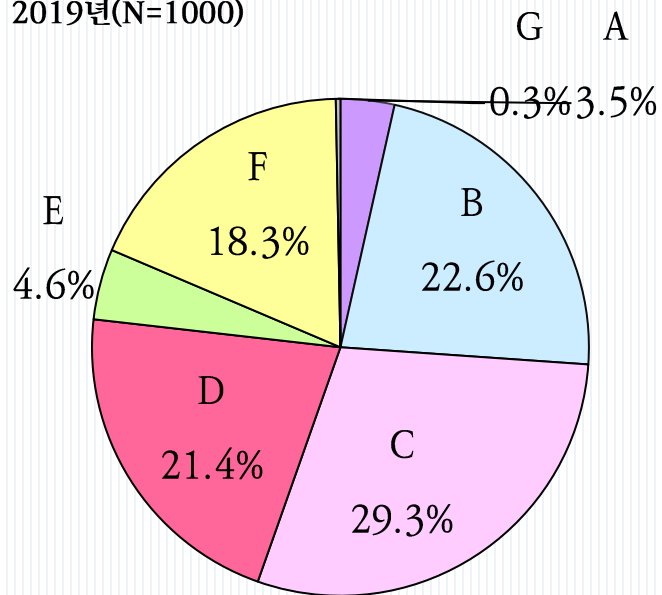


◆ 일본 여론: 좋은 인상    ● 일본 여론: 좋지 않은 인상    ▲ 한국 여론: 좋은 인상    ✕ 한국 여론: 좋지 않은 인상

# 상대국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과 태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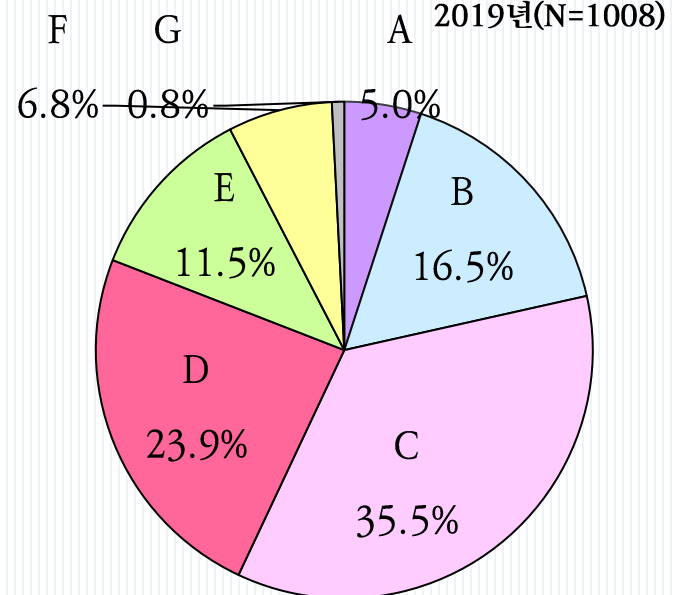
일본국민 (N=1,000)

2019년(N=1000)



한국국민 (N=1,008)

2019년(N=1008)



A	매우 잘하고 있다
B	약간 잘하고 있다
C	어느 쪽도 아니다/보통이다
D	약간 못하고 있다
E	매우 못하고 있다
F	모르겠다
G	무응답

# 일본은 적인가?: 위안부합의의 교훈

1. 안보 경쟁국 vs. 협력국
  - 미중 경쟁이란 전략 환경
2. 경제적 경쟁 vs. 경제적 상호의존
  - 경제 보복 수단 효용 한계
3. 양국 갈등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음.

1990 정대협 발족, 1991 김학순 할머니 기자회견

1992 일본 주오대학 요시미 교수, 공문서 6점 발굴

1993 한국정부 자구조치

- 생활안정지원

(기본금 500만원+매월생활지원금+의료+임대주택)

- 일측에 대한 금전적 배상 불요구 (단, 법적책임 주장)

-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 계속

1993 일본정부 고노 관방장관담화

-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 등이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짐

- 사과, 반성, 역사 교훈으로 직시, 역사교육

1994 일본측 아시아여성평화기금 구상 발표 (무라야마 내각)

(95 기금 발족, 97 기금활동 개시, 07 해산)

- 일본총리 사과편지 (도의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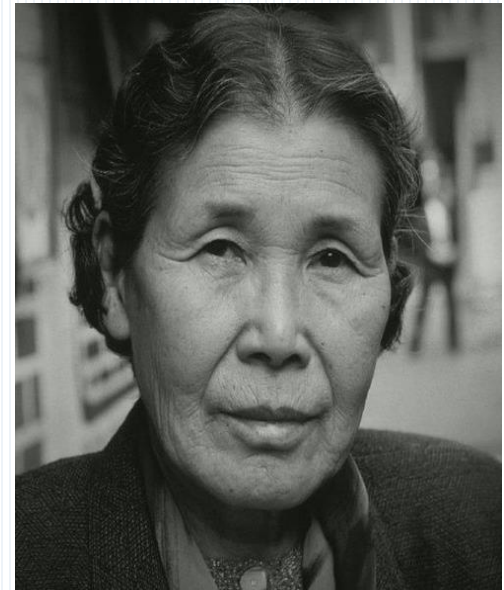
- 위로금 200만엔 + 의료복지지원 300만엔

1998 한국정부 추가적 지원조치


- 4,300만원 지원금

**현황** (500 + 4,300 + 생활비 月95 + 간병비 年1,200 + 의료 + 임대주택 + 지자체 지원)

**총계** 236명 (생존 18명)



# 한일 위안부 외교



1991년 김학순 여사 공개 증언 이후 4반세기 걸쳐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한일 합의(2015.12)

국민 여론 다수의 반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과 반발

2017년 대선과정에서 5대 후보 모두 재협상 요구

외교부 위안부 TF 보고서 (2017.12)

화해치유재단 해산 (20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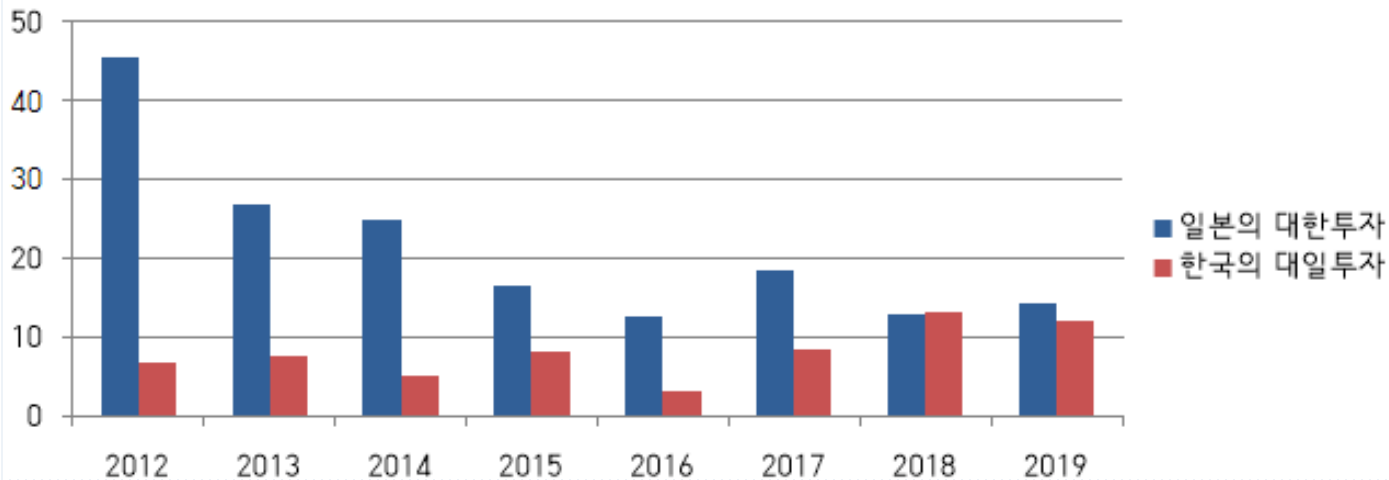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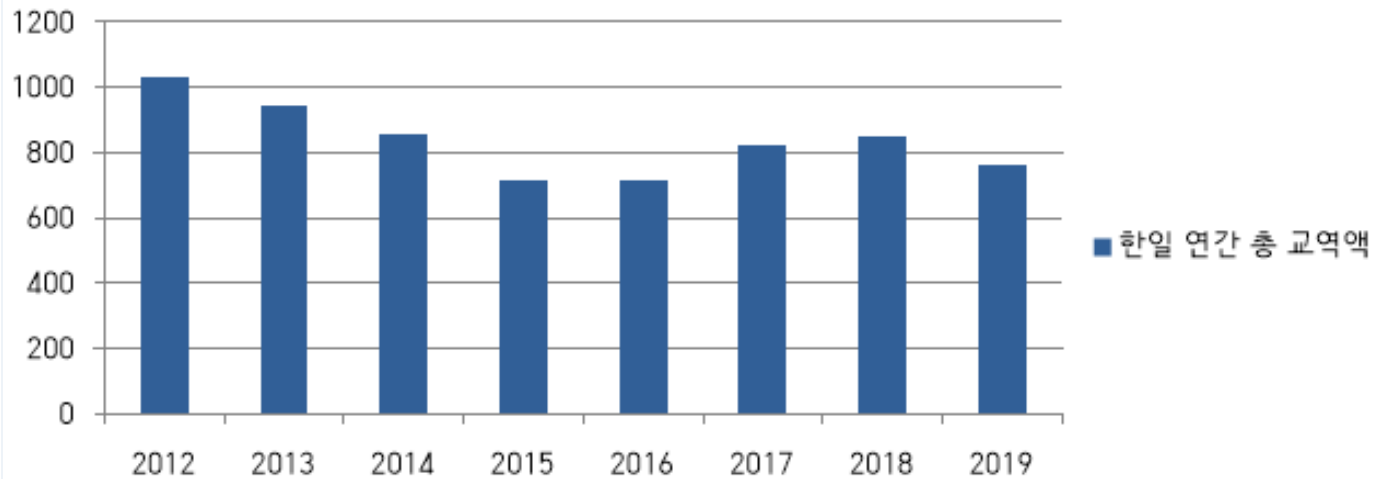


# “We Want This To Be A Match Without An Audience”



한미일정상회담 (2014.03.26)

# 경제 디커플링?



#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일본측 발표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한국측 발표

1.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 EAI 한일관계 시국 토론회



## 모시는 글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위기의 한일관계에 대해 청년-기성 세대가 함께 논의하는 <EAI 시국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역사-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지금,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을 넘어 한일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솔직하게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3시~6시

취지발언 손 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기조발언 이홍구 전 국무총리

### 패널

하영선 (EAI 이사장, 사회)  
박요한 (연세대 총학생회장)  
최시은 (미래당 교육국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철 (서울대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고문)  
최상용 (전 주일대사)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다리소극장

서울 태봉구 영등포로2길 43  
TEL. 02-396-7830  
동대입구역 2번출구 5도M 1번  
\*115교동 115빌딩 101호



참가신청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www.eai.or.kr](http://www.ea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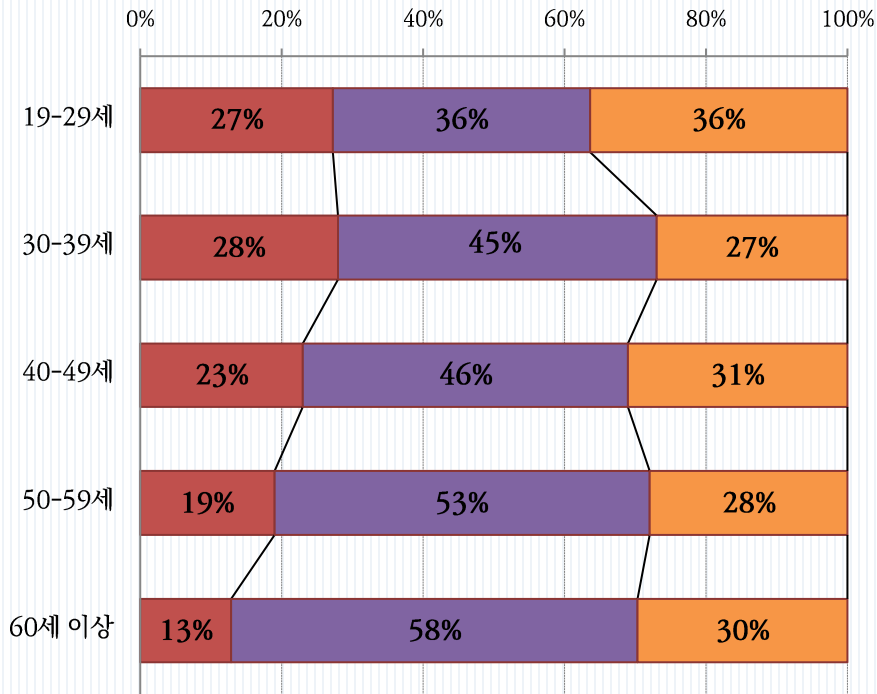
문의 동아시아연구원 이영현 연구원  
ylee@eai.or.kr

주최 동아시아연구원  
(East Asia Institute)

참가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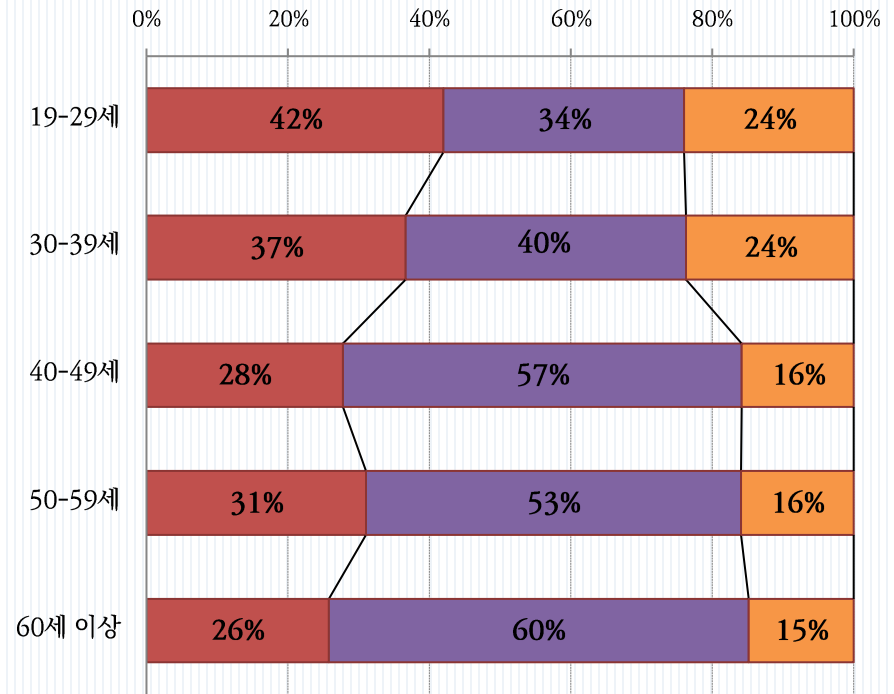
# 상대국에 대한 세대별 호감도

일본국민 (N=1,000)



■ 좋은 인상   ■ 좋지 않은 인상   ■ 어느 쪽도 아니다

한국국민 (N=1,008)



■ 좋은 인상   ■ 좋지 않은 인상   ■ 어느 쪽도 아니다

# 기미독립선언서

日本の 無信을 罪하려 안이하노라.

日本の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급한 우리는 他的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網繆하기에 급한 우리는 宿昔의 懲辯을 暇치 못하노라.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요,

決코 他人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自己의 新運命을 開拓할 뿐이요,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 他를 嫉逐排斥함이 아니로다.

# 코로나 19와 장기 대응

미중경쟁과 한일협력

코로나19와 한일협력

저항민족주의 극복

“극일 20년계획”



# 장기 대응: 克日 장기플랜

## 와신상담 (臥薪嘗膽)

- 임오군란 후 “군비증강 8개년 계획”
- 삼국간섭 후 “전후10년계획” (육·해  
군 증강, 기간산업 육성, 증세 합의);  
“영일동맹”

## “극일 20년 계획”





